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통일외식조사(1/3년차)

KINU 연구총서 23-10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 민태은 | 윤광일 | 구분상
Antonio Fiori | Marco Milani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연구책임자

이상신(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구본상(충북대학교 부교수)

Antonio Fiori(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부교수)

Marco Milani(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조교수)

KINU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KINU 통일의식조사(1/3년차)

KINU 연구총서 23-10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저자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분상, Antonio Fiori, Marco Milani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리드릭(02-2269-1919)
I S B N	979-11-6589-157-2 93340
가격	19,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15
----	----

Chapter I

서론 이상신	29
----------	----

1. 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 ————— 31
2.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 35
3.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분류 ————— 40

Chapter II

통일 및 북한인식 이상신	43
-----------------	----

1.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45
2.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55
3. 소결 ————— 63

Chapter III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논쟁의 정치적·이념적 차원

| 이상신 · Antonio Fiori · Marco Milani ————— 65

- 1. 서론 ————— 67
- 2. 한국의 정치 및 이념 분열과 외교 및 안보 정책에의 영향 ————— 69
- 3. 한국의 정치적·이념적 분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 73
- 4. 한국 자체적 핵보유 여론에 대한 기존연구 ————— 81
- 5. 여론조사 분석: 한국 핵무장 여론에 국내정치와 이념이 미친 영향 — 90
- 6. 소결 ————— 112

Chapter IV

북한 핵 위협 평가와 북한 이미지 그리고 핵무장 정책 선호 | 윤광일

————— 115

- 1. 서론 ————— 117
- 2. 이론적 배경 ————— 122
- 3. 경험적 분석 ————— 136
- 4. 소결 ————— 157

Chapter V

주변국 정세 변화 속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 | 민태은
161

1. 문제 제기	163
2.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164
3. 미중관계 인식	168
4. 양안관계	171
5. 한일관계	174
6.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185
7. 소결	202

Chapter VI

워싱턴 선언이 주변국 및 핵개발 인식에 미친 효과 분석 | 구분상
205

1. 서론	207
2.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설정	210
3. 워싱턴 선언과 주변국 인식 변화	216
4. 워싱턴 선언과 핵개발(핵보유) 태도 변화	225
5. 심층 분석: 핵무기 개발 유형별 변화	231
6. 소결	242
7. 부록	246

Chapter VII

결론과 정책제언 | 이상신 ————— **251**

- 1.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와 정치양극화 ————— 253
- 2.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과 핵보유 여론의 역설:
워싱턴 선언의 효과와 한계 ————— 256
- 3. 한일 군사협력 가능성과 접근방법 ————— 259

참고문헌 ————— **262**

Appendix

부록 ————— **285**

- 1. 2014~2023년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 ————— 287
- 2. 2023년 KINU 통일외식조사 설문 문항 ————— 304
- 3. 2023년 KINU 통일외식조사 결과표 ————— 320

최근 발간자료 안내 ————— **445**

〈표 Ⅰ-1〉 KINU 통일외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3) 33

〈표 Ⅰ-2〉 2023년 KINU 통일외식조사 개요 35

〈표 Ⅰ-3〉 KINU 통일외식조사의 한국사회 코호트 분류 41

〈표 Ⅲ-1〉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여부를 조사한 기존 연구 일람 83

〈표 Ⅲ-2〉 정치이념별 핵무기 보유 찬반 비교 98

〈표 Ⅳ-1〉 정치이념 성향, 이데올로기 성향(RWA, SDO, 체제정당화 동기),
연령 간 상관관계 140

〈표 Ⅳ-2〉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과 북핵 위협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142

〈표 Ⅳ-3〉 북한 이미지에 대한 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145

〈표 Ⅳ-4〉 핵 관련 정책에 대한 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152

〈표 Ⅳ-5〉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의 다중회귀분석 155

〈표 Ⅴ-1〉 한중관계 부정적 평가 이유 165

〈표 Ⅴ-2〉 한중관계 부정적 평가 이유: 지지 정당별 166

〈표 Ⅴ-3〉 한중관계 부정적 평가 이유: 코호트별 166

〈표 Ⅴ-4〉 미중 패권 경쟁: 지지 정당별 170

〈표 Ⅴ-5〉 미중 패권 경쟁: 코호트별 171

〈표 Ⅴ-6〉 한국 외교 범위 174

〈표 Ⅴ-7〉 한일관계 전망: 지지 정당별 175

〈표 Ⅴ-8〉 한일관계 전망: 코호트별 176

〈표 Ⅴ-9〉 한일동맹 지지: 지지 정당별 178

〈표 Ⅴ-10〉 한일동맹 지지: 코호트별 179

〈표 V-11〉 일본의 핵개발 권리 동의: 지지 정당별	181
〈표 V-12〉 일본의 핵개발 권리: 코호트별	181
〈표 V-13〉 일본의 핵개발 전망: 지지 정당별	183
〈표 V-14〉 일본의 핵개발 전망: 코호트별	183
〈표 V-15〉 미국의 일본 재무장 지원: 지지 정당별	184
〈표 V-16〉 미국의 일본 재무장 지원: 코호트별	185
〈표 V-17〉 과거사 인식: 성별 및 지지 정당별	189
〈표 V-18〉 과거사 인식: 코호트별	189
〈표 V-19〉 일본에 대한 호감도	190
〈표 V-20〉 일본에 대한 호감도: 성별 및 지지 정당별	191
〈표 V-21〉 일본에 대한 호감도: 코호트별	191
〈표 V-22〉 일본의 군사 위협: 성별 및 지지 정당별	192
〈표 V-23〉 일본의 군사 위협: 코호트별	192
〈표 V-24〉 미국의 핵우산 신뢰: 성별 및 지지 정당별	195
〈표 V-25〉 미국의 핵우산 신뢰: 코호트별	195
〈표 V-26〉 한일동맹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6
〈표 V-27〉 일본의 핵보유 권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99
〈표 VI-1〉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 호감도 변화(매칭 비적용 표본)	218
〈표 VI-2〉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 호감도 변화(유전적 매칭 적용 표본)	219
〈표 VI-3〉 한미정상회담의 주변국 호감도 한계효과 (유전적 매칭 적용 표본)	219
〈표 VI-4〉 워싱턴 선언 전후 주변국을 현재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222
〈표 VI-5〉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을 장차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변화	224
〈표 VI-6〉 한미정상회담 전후 남한 핵무장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변화	225
〈표 VI-7〉 한미정상회담 전후 핵무기 관련 쟁점 태도 변화	229

〈표 VI-8〉 한미정상회담 전후 한·미·일 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	230
〈표 VI-9〉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경제제재 (매칭 적용 표본, N=721)	232
〈표 VI-10〉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주한미군 철수 (매칭 적용 표본, N=721)	236
〈표 VI-11〉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개발비용 (매칭 적용 표본, N=721)	238
〈표 VI-12〉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평화적 이미지 (매칭 적용 표본, N=721)	241
〈표 VI-1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핵개발에 대한 유형 (유전적 매칭 적용 표본, N=721)	246

<그림 II-1> 통일필요성(2014~2023)	46
<그림 II-2> 통일필요성: 양극단 값의 비교(2014~2023)	48
<그림 II-3> 통일필요성(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7~2023)	49
<그림 II-4> 통일선호와 평화공존선호(2016~2023)	50
<그림 II-5> 탈민족주의 통일관과 민족주의 통일관(2017~2023)	53
<그림 II-6> 연합제적 통일관과 단일제적 통일관(2020~2023)	54
<그림 II-7> 북한에 대한 관심(2015~2023)	56
<그림 II-8> 북한 이미지의 변화(2014~2023)	57
<그림 II-9> 북한의 공격적 의도 평가(2019~2023)	58
<그림 II-10>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의도 평가(2019~2023)	59
<그림 II-11> 북한의 평화의지에 대한 평가(2019~2023)	60
<그림 II-12> 김정은 정권 신뢰도(2016~2023)	61
<그림 II-13>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필요성(2016~2023)	62
<그림 III-1> CCGA 조사: 정당지지별 한국 핵무장 찬반 비교(2021)	84
<그림 III-2> 아산정책연구소 조사: 한국 핵무장 지지 여론 시계열 추이 (2010~2022)	84
<그림 III-3>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핵무기 개발 여론(2022)	85
<그림 III-4> IPUS 조사: 한국 핵무장지지 여론 시계열 추이(2013~2023)	86
<그림 III-5> 통일과나눔 재단 조사: 한국 핵무장지지(2022)	88
<그림 III-6> 최종현학술원 조사: 한국 핵무장 지지(2022)	89
<그림 III-7> 한국 핵무기 보유 필요성(2014~2023)	93
<그림 III-8> 핵개발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 인지	96
<그림 III-9> 각 위기 조건하에서의 핵개발 동의 여부	96
<그림 III-10> 핵보유 찬성 여론: 지지 정당별 비교 (2019~2023)	97

〈그림 Ⅲ-11〉 미국핵 재배치 찬성: 정당 지지별 비교(2019~2023)	99
〈그림 Ⅲ-12〉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 지지 정당별 비교	99
〈그림 Ⅲ-13〉 미국의 핵확장억제 신뢰: 지지 정당별 비교	100
〈그림 Ⅲ-14〉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지지 정당별 비교	101
〈그림 Ⅲ-15〉 핵확장억제와 한국 핵개발 필요성: 지지 정당별 비교	102
〈그림 Ⅲ-16〉 미국의 한국 국익 고려: 지지 정당별 비교(2020~2023)	103
〈그림 Ⅲ-17〉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104
〈그림 Ⅲ-18〉 남북 군사력 비교	105
〈그림 Ⅲ-19〉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 지지 정당별	106
〈그림 Ⅲ-20〉 북핵 위협에 대한 관심: 지지 정당별	106
〈그림 Ⅲ-21〉 핵 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지 정당별	107
〈그림 Ⅲ-22〉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2016~2023)	108
〈그림 Ⅲ-23〉 핵 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2016~2023)	108
〈그림 Ⅲ-24〉 남북대화의 효과성: 지지 정당별	109
〈그림 Ⅲ-25〉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지지 정당별	110
〈그림 Ⅲ-26〉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2016~2023)	111
〈그림 Ⅳ-1〉 감정, 관심, 행동 차원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함 평가의 변화 (2016~2023)	137
〈그림 Ⅳ-2〉 북한 이미지(지원, 협력, 경계, 적대) 평가의 변화 (2014~2023)	144
〈그림 Ⅳ-3〉 핵 정책 선호 분포	148
〈그림 Ⅳ-4〉 독자 핵무기 개발 선호 분포	151
〈그림 Ⅴ-1〉 한중관계 평가	165
〈그림 Ⅴ-2〉 세계의 패권	168
〈그림 Ⅴ-3〉 미중 패권 경쟁	170
〈그림 Ⅴ-4〉 중국의 대만 공격 전망	172

〈그림 V-5〉 대만 분쟁 시 개입	173
〈그림 V-6〉 한일관계 전망	174
〈그림 V-7〉 한일 군사동맹	177
〈그림 V-8〉 일본의 핵개발 권리	180
〈그림 V-9〉 일본의 핵개발 전망	183
〈그림 V-10〉 미국의 일본 재무장 지원	184
〈그림 VI-1〉 최근접 이웃쌍 매칭(nearest neighbor pair matching) 적용 후 공변인 균형	215
〈그림 VI-2〉 공변인 균형 적용: 유전적 매칭(genetic matching) 적용 ...	216
〈그림 VI-3〉 주변국 호감도 조사일자별 평균 호감도 추이	220
〈그림 VI-4〉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경제제재	233
〈그림 VI-5〉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경제제재, 우익권위주의 성향 ..	235
〈그림 VI-6〉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주한미군 철수	236
〈그림 VI-7〉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개발비용	239
〈그림 VI-8〉 워싱턴 선언 전후 유형 변화: 평화적 이미지	242

Ⅲ.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논쟁의 정치적·이념적 차원

이상신(통일연구원)

Antonio Fiori(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Marco Milani(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논쟁의 정치적 · 이념적 차원

1. 서론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핵무기와 핵 정치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 특히 보수 진영의 여러 중요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적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을 겪으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 우산으로 보호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론의 과반 이상이 자체적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18/}

이러한 이유로 핵무기와 핵 정치는 더 이상 한국에서 금기되는 주제가 아니며, 관련된 논의는 이미 국내의 공론장과 정당 정치의 장으로 진입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지역 행위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즉각적으로

^{18/} 4절 “한국 자체적 핵보유 여론에 대한 기존연구” 참조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실제로 핵개발에 착수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핵개발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분석할 가치가 있는 국내 여론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2023년 KINU 통일외식조사에 기반하여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에 대한 논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분석은 한국 내 정치적 분열 및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배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북한의 실제 및 인지된 위협 수준이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한국 내 정치적 양극화 수준은 확실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 돋보인다. 이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흔히 묘사되는 것만큼 강력하거나 혹은 증가 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 정치 및 이념적 차이가 핵무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의 특징과 주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장은 권위주의 시대에 뿌리를 둔 한국의 정치적·이념적 분열의 기원을 추적하고, 한국 외교 정책 전통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이러한 특징들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의 3절에서는 지난 두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두 정부 사이에서 가장 분열적인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 문제, 즉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 대한 차이점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재구성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권 사이의 변화에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크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구성은 동시에 데이터 분

석에 필요한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의 4절에서는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 이전에 발표된 기존의 여론조사 연구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 핵개발에 수반되는 위험 및 비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안보 및 역지력 문제와 관련된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핵의 위협에 대한 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다. 핵무기에 대한 태도는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주요 안보 제공국이고 북한은 핵 역지력이 상대해야 할 주요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이슈는 관련성이 높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핵 정치와 정당 정치 및 이념적 차원을 결합한 포괄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2. 한국의 정치 및 이념 분열과 외교 및 안보 정책에의 영향

보수-진보의 분열과 그것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강대국 간의 대립과 분단된 한반도의 팽배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일반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보수 세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안보를 추구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왔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은 대미 안보 의존과 반공정책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정치가 비경쟁적이었기 때문에 야당 및 반대 세력의 견해와 압력을 무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정부의 강압적 능력은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의 연계를 이루는 한 가지 요소였다(Snyder 2018, 53-82). 따라서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 초기까지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했다.

1970년에서 8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경험했고 이는 점차 진보적 사고를 배양하고 국내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반공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적 운동이 이 시기에 성장했는데, 이들은 북한을 화해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미국을 이를 방해하는 외세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받았다(Hwang 2017, 14).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전후 남한의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통치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 노태우 정부(1988~1993년)의 초기 노력에 이어 김영삼 정부(1993~1998년)가 한국 정치에서 군부 헤게모니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민주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국 민주화가 공고화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부의 외교 정책에 강력하게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 정치의 민주화는 이념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다양하고 종종 양극화된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진보 진영은 북한을 협력해야 할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할 적으로 바라보는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보수와 진보의 균열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이전 노태우 정부 시기보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고, 진보 진영도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억지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진보 진영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이전의 대미관계 접근 방식과 비교했을 때 큰 발전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은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의 정체성과 이념의 핵심 요소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확보, 사회정의,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접근,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 등의 이슈가 진보 진영의 우선적인 의제였다. 마찬가지로 외교 및 안보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 정당들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 태도와 한미동맹의 절대적 고수 등의 정치적 속성을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영향으로 두 개의 주요 정치 진영 사이에 강한 이념적 분열이 발생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Hahm 2005, 58-62).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두 정치 진영 간의 첫 번째 권력 교체였으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두 주요 정치 진영의 정책선호, 우선순위 및 전략은 한국의 지역 및 국제정치에서의 전략 형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교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Milani and Fiori 2019, 30-53). 예를 들어,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북한과의 협력과 관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남북관계의 중심 정책으로 부상했다(Moon 2001). 같은 진보적 외교 정책 전통에 따

라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보다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력적 접근을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2007년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이념적 전통의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 방식을 재조정했다. 역시 보수정당 출신인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국내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외교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을 지역 및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한 새로운 딜레마에 맞춰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으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보수 정치 전통의 초석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우호적이고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이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는 보수적 전통에 대한 수정 시도로 간주되었다. 결국 이러한 적응 과정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에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전통적인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전통의 영향을 보여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뒤이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진보 진영이 정권을 되찾았다. 남북대화와 협력을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진보적 외교 정책의 전통적 기조로 분명하게 복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3. 한국의 정치적·이념적 분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이념적, 정치적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의 분열(보수는 대북 관여보다는 한미동맹과 대북억제(deterrent)를 선호하고, 진보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보다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최근 두 정부의 주요 외교 및 안보 정책 이슈에 대한 상이한 접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 한미동맹, 역내 세력균형에 대한 두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이념과 소속 정당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을 통해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지만, 새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같이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외세로부터 자주성을 추구하고, 남북한 간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는 등 관여(engagement)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Fifield 2018).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장문의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민족적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2017a, 191). 따라서 역내에서 한국의 뚜렷한 정체성과 독립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었다. 민족주의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우월적 위치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문 대통

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류를 개선하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지역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워싱턴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을 조율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동북아를 넘는 더 넓은 지역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 교류하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을 확보하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한 것과 달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Cho and Park 2018).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으면서도,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압과 제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지만, 이전의 미국 정부들은 강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선호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접근법을 취하면서 북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관계, 그리고 한국의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단순히 북핵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 질서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러한 시각은 북핵 딜레마 해결이 더 큰 지역적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 결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동맹 역학 관계와 지역주의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되, 이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회담을 위해 접촉하는 동안에도 외교 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도록 했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노선을 유지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외교라는 이중 전략에 반영되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주의 전략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노효동 외 2017). 2017년 8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강압적 조치만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Choe 2017).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는 지 불과 몇 주 후인 2017년 9월,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제재보다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정우상 2017). 특정 정책 부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료 지원과 종교 교류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대북 사업을 허용했다.

2017년 7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윤곽이 잡히자 문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전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북한에 관여정책을 펴고 남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은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랐다. 이전 보수 정권과 문 대통령의 차이는 통일과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달 첫 독일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한 험난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새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 붕괴도 흡수통일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문재인 2017b, 88-89).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발전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7, 22). 또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남북 간의 생산적 경제 협력을 단절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문재인 2017a, 191). 그러나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 강조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계획이 없다고 비난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김정현 2017).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은 문 대통령의 끈질긴 대화 촉진 시도에 박수를 보냈고 보수 세력이 냉전적 반복 태도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 한국인의 77% 이상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했다(조정훈 2018). 북한 지도자와의 두 차례의 생산적인 만남과 북한에 대한 끈질긴 관여 전략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아 취임 첫 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김남권 2018). 이러한 국내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장/도지사 중 14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지역 차원의 균형 외교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회담 말미에 서명한 판문점 선언은 문 대통령

의 지역적 관계,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양 정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반도 문제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선언문의 대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한 “중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4.27.).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주도적 지위와 한국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와 대조를 이뤘다(Han and Lim 2023, 291-312).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측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9.).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기적으로 선을 긋는 동시에 북한과의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며 여러 차례 남북한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노이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거의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크게 악화되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하였으며, 계속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스스로 선언한 무력도발 중지를 끝내겠다고 협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대화 복귀를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막혀 있다.

북한이 회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제한된 대통령 임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3년 동안 북한을 냉담한 태도로부터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3월 9일,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정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한국 유권자들이 윤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빈부 격차와 높은 청년 실업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처 실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5월 10일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는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과 외교 및 안보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한번 정치적·이념적 분열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이었는데, 북한 비핵화가 북한과의 어떠한 관여, 대화, 협력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 보수 강경책이 회귀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한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역사 논란에서 벗어나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입장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한한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을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모호하게 제안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새로운 입장을 분명히 했다(신정원 2022). 이 구상은 박근혜, 이명박 등 보수적인 전임자들이 제안한 다른 구상과 매우 유사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새롭게 강조했다(김은중 2022). 즉,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6월 5일 4곳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자 한국과 미국은 다음날 미사일 8발을 발사하며 맞대응했다(Ko 2022). 이러한 움직임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던 이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한미전략공조 강화 노력은 한국 정부가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전략 틀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채택은 한미전략공조의 범위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과의 공조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일 3국 협력의 확대는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는 미국의 확장 역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개선하며, 북한 인권 문제 및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북한의 군비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3국 공공 외교를 조율하는 동시에 가치 기반 투자, 개발, 역지 전략의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한국이 포괄적인 대북 경제 원조 및 지원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골자였으며, 대통령은 북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나열했다(Lee 2022). 이 계획은 긍정적인 대북협력 방향을 목표로 하였지만, 과거 다른 보수 대통령들이 제안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었다. 실제로 북한 매체를 비롯한 많은 분석들은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계획(통일부 북한정보포털, n.d.)을 비교했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체제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같은 운명을 겪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한국이 구상하는 유형의 북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비핵화만큼이나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현대 북한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핵심 원칙, 즉 핵보유국 지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주체 사상에 어긋난다. 남한의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김영정 성명을 통해 나온 북한의 반응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강남떡 따위”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이었고, 이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분명히 거부했다(Roh 2022).

2022년 후반은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8월 말 4년 만에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가 재개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후 몇 주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군사 행동이

계속되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국 내에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쟁이 촉발되었는데, 이는 한국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를 원하는 한국의 여론에 화답했는데, 그 내용은 새로 출범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통해 긴밀한 핵 계획과 조율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을 직접 강조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워싱턴 선언과 후속 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4. 한국 자체적 핵보유 여론에 대한 기존연구

하노이 정상회담의 파국 이후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멀어지면 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핵 위기의 고조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결국은 핵무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보유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윤상호 2023).

한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여론이 자체적인 핵무장

이나 미국과의 핵공유를 지지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동맹에 대한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것처럼 미국의 국내정치에 한미동맹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ICBM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무릅써야 한다. 과연 미국의 주요 도시가 북한의 핵무기로 파괴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실제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있다. <표 III-1>에서는 대표적인 기존 여론조사들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전화면접과 온라인 조사, 대면면접과 공론조사까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추출방식, 그리고 사용된 측정도구도 각 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60%에서 70%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를 지지한다는 것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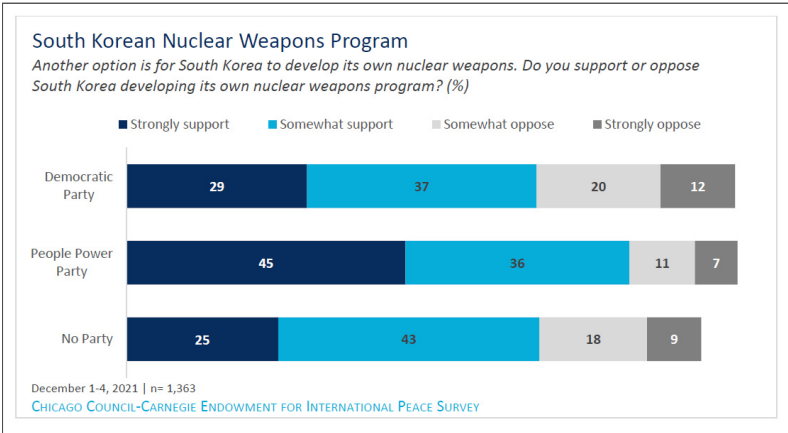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f Global Affairs, 이후 CCGA)의 여론조사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상당히 이른 시기인 2021년 12월에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500명의 응답자 중 71%가 핵개발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Dalton et al. 2022, 2). 지지 정당별로 비교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 66%가 핵개발을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1%가 찬성하여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핵개발 지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Dalton et al. 2022, 6).

표 III-1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여론을 조사한 기존 연구 일람

조사기관	조사방법	표본수	조사기간	측정도구	척도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1500	2021년 12월 1일 ~ 4일	한편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안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십니까?	4점 척도
아산정책 연구원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1000	2022년 3월 10일 ~ 12일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대면면접 조사	1200	2022년 7월 1일 ~ 25일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5점 척도
통일과 나눔	온라인 조사/공론조사	1000 (20~39세)	2022년 11월 14일 ~ 21일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최종현 학술원	대면면접 조사	1000	2022년 11월 28일 ~ 12월 16일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출처: Dalton et al.(2022); 제임스 김 외(2022); 김범수 외(2022); 통일과나눔(2023); 최종현 학술원(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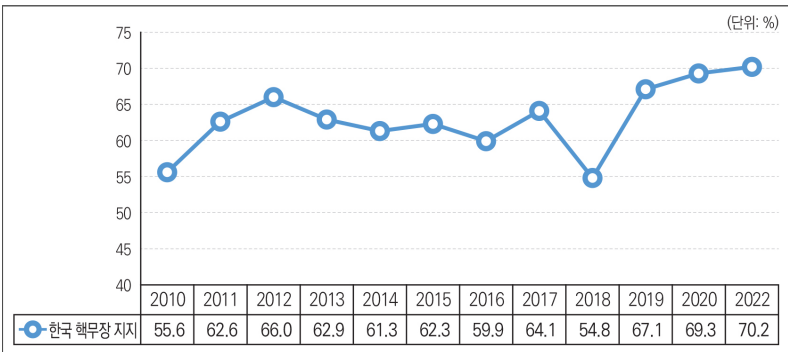
그림 III-1 CCGA 조사: 정당지지별 한국 핵무장 찬반 비교(2021)



출처: Dalton et al.(2022, 6).

아산정책연구원 또한 CCGA와 비슷한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22년 3월에 실시되었으나,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측정해오고 있다(제임스 김 외 2022; 제임스 김 외 2023).

그림 III-2 아산정책연구소 조사: 한국 핵무장 지지 여론 시계열 추이(2010~2022)



출처: 아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제임스 김 외 2022, 31)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그림 III-2〉의 그래프는 2010년 이후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최소 54.8%에서 2022년의 최고 70.2%까지의 여론이 핵무장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서는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것이 핵무기 개발 여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림 III-3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핵무기 개발 여론(2022)

문1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32.0
찬성하는 편이다	38.2
반대하는 편이다	18.4
매우 반대한다	9.8
모름·무응답	1.5

문13. 독자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1.3
찬성하는 편이다	42.3
반대하는 편이다	22.1
매우 반대한다	12.2
모름·무응답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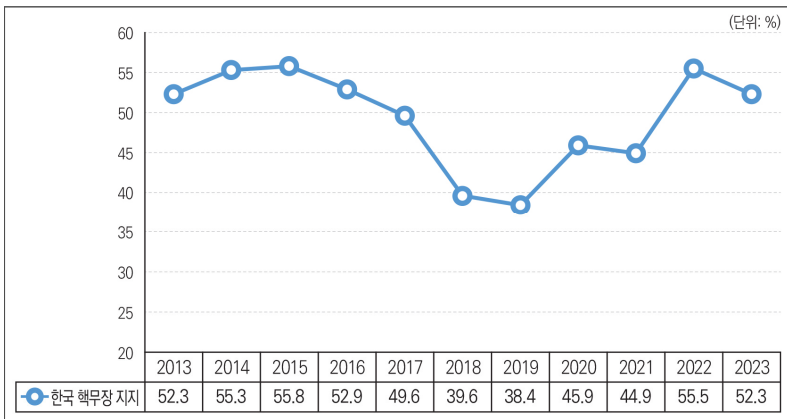
출처: 제임스 김 외(2022, 55).

〈그림 III-3〉에 소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지를 물었을 때 70.2%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독자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 제재

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라는 전제를 달아 다시 한번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찬성 응답은 63.6%로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핵무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응답자들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IPUS)도 연례 통일의식조사에서 꾸준히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있다. IPUS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반응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III-4>와 같다.

그림 III-4 IPUS 조사: 한국 핵무장지지 여론 시계열 추이(2013~2023)



출처: 김범수 외(2022, 1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3, 46).

IPUS의 조사도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각각 핵무장

찬성이 39.6%와 38.4%로 가장 낮았던 것도 같으며, 이후 찬성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5%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지지비율이 52.3%로 하락하는데, 이렇게 2023년에 핵무장 지지 하락하는 것은 KINU 통일외교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 현상이다.

IPUS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핵무장 지지 여론이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IPUS 조사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은 4점 척도를 사용하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PUS 조사의 5점 척도는 찬성과 반대의 중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반면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는 그 중간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IPUS 조사에서 자신의 태도를 답하는데 소극적이거나 이 핵무장 문제에 대해 두려한 소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무응답을 선택하거나 중간값을 선택하는데, 이 차이가 두 조사 결과의 상이함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통일과나눔 재단의 한국 핵무장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통일과나눔 조사는 모집단이 20대와 30대 청년 집단으로, 18세 혹은 19세 이상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다른 조사들과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나눔 재단은 2022년 11월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2030세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도 실시했다(통일과나눔 2023). 그런데,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는(주형식 2023; 오수진 2023) 한국 핵무장 찬성 비율이 68.1%라는 내용은 통일과나눔 재단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보고서(통일과나눔 2023)의 124쪽에서는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성별/연령별/정치이념별로 비교하는 막대그래프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이 그래프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고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분포도 누락되어 있다. 아마도 68.1%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통일과나눔 재단에서 따로 배포한 언론보도자료에 언급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100명의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가하기 이전과 참가한 이후에 두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그림 III-5 통일과나눔 재단 조사: 한국 핵무장지지(2022)

〈표 IV-5-7〉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남한의 핵무기 보유 찬반 의견 전체 [Base : 응답자 전체(n=100), %]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전체	토론단 사전조사	6.0	26.0	32.0	48.0	20.0	68.0
	토론단 사후조사	11.0	25.0	36.0	43.0	21.0	64.0
GAP(사후-사전)		5.0	-1.0	4.0	-5.0	1.0	-4.0

출처: 통일과나눔(2023,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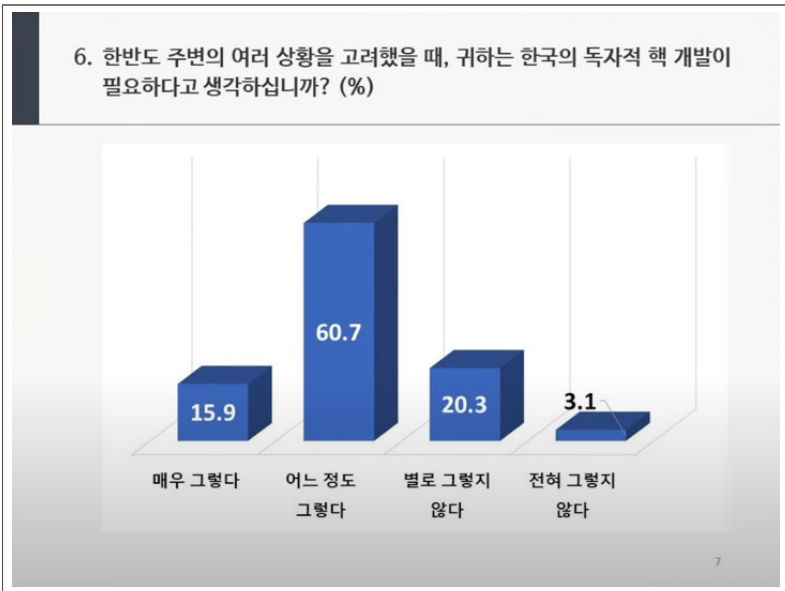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과나눔 재단의 ‘2030 청년 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한 2030 청년 100명 중 68%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했다. 이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사후조사에서 64%의 참가자가 여전히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견고한 심리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조사 방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종현학술원의 여론조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한 이 조사는, 한국 핵무장 찬성 비율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서 다른 여론조사 보다 상대적

으로 매우 높았다(신나리 2023).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간되지는 않았으며, 최종현학술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언론에서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19/}로 측정하였다.

최종현학술원의 조사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최종현학술원 2023). 아래의 그래프는 이 동영상 중 한국 핵무장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림 III-6 최종현학술원 조사: 한국 핵무장 지지(2022)



출처: 최종현학술원(2023).

^{19/} 1=매우 그렇다, 2=어느정도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5. 여론조사 분석: 한국 핵무장 여론에 국내정치와 이념이 미친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의 다른 어떤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다. 그는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미국의 확장 핵억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Choe 2023). 이 주장은 특히 미국,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수준이 어느 정도로 더 심각해지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장의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잠재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다. 이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에 윤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며,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대응했다(Lee 2023a).

미국은 한국의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고 정기적으로 미 항공모함 타격단이 참여하는 연합군사 훈련과 해군 훈련에 추가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이본영 2023).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복원하는 것에 더해,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한국과 양자 대화를 강화하기로 약속

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도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확장 핵억제에 관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Lee 2023b).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중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건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황희진 2023). 또 다른 저명한 보수 정치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에 한국 핵무장을 주장했다(이경미 2019), 3월 로이터 통신과의 유명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Shin 2023). 2월 말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가능성을 제기했고(문광호 2023),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 의원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오연서 2023). 핵무장을 촉구하는 논리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이러한 사례들은 이 자체 핵보유라는 주제가 이제 공론장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 문제는 2023년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적 주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슈와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다른 핵심 문제들, 즉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미국의 역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의 2절에서 강조했듯이 이 두 가지 이슈는 한국 정부의 정당과의 관계 및 정치적 성향, 그리고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적 분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 문제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사이에는 이들 특정 사안에 관련되어 분명한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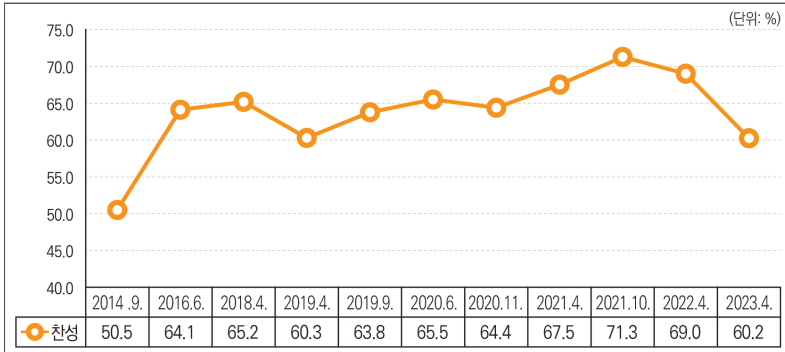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과 대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전략과 이니셔티브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더불어 거의 동시에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핵 위협을 극적으로 확대하거나 북한 핵무기가 양적,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첫째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태도는 무엇이며, 둘째,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셋째, 정치이념과 국내 정치의 분열이 이러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최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CCGA(71.0%), 아산정책연구원(70.2%), IPUS(55.5%), 통일과나눔재단(68.1%), 최종현학술원(76.6%) 등의 조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의 비율이 70%가 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핵보유의 필요성을 꾸준히 질문해온 KINU 통일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언론보도와 달리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2023년 KINU 통일외식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은 60.2%였는데, 이는 비록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2022년의 69%에 비하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다.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외식조사에서는 2014년부터 아래의 세 문항을 사용하여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왔다. 이 문항들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III-7>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그림 III-7 한국 핵무기 보유 필요성(2014~2023)



주 1: 질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긍정답변을 합산하여 ‘찬성’으로 코딩하고 위 그래프에 표기함.

2014년에 처음 한국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사용한 측정도구는 리커트 척도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반응을 4점 척도²⁰⁾로 측정했다. <그림 III-7>의 그래프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다소 혹은 매우 찬성하는 답변을 합하여 ‘찬성’으로 코딩했다.

2016년 및 2018년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귀하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문항에는 네 개의 답지²¹⁾가 있었다.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조사문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문항 역시 4점 척도로 측정했다.²²⁾

20/ 1=매우 반대한다, 2=다소 반대한다, 3=다소 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

21/ 1=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 2=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기존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3=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 4=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3번과 4번을 택한 이들을 ‘핵보유 찬성’으로 코딩함.

2023년 조사에서 상당폭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아진 것은 일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의 차원에까지 확산되면서, 핵개발 및 보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는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2021년에 핵보유 찬성여론이 가장 높았다가 2022년부터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보유 찬성에 대한 여론이 줄어든 것을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봄 당선된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2년에 북한은 역대 가장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건수는 총 183건인데, 이 중 21%인 39건이 2022년에 집중되어 있다(통일연구원 2022, 40). 마지막으로 남북이 회담장에 마주 앉았던 것은 2018년 12월 14일로, 2023년 10월 현재까지 남북은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대화가 단절된 것인데, 이는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기간의 남북대화 단절이다(통일연구원 202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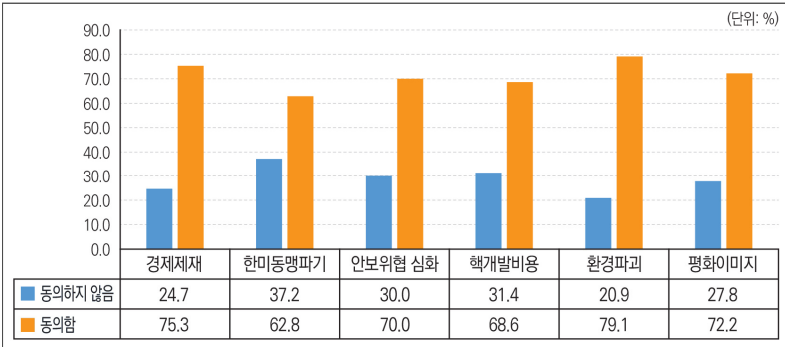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높은 찬성률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가

22/ 1=남한 핵무장 절대 반대, 2=남한 핵무장 어느 정도 반대, 3=남한 핵무장 어느 정도 찬성, 4=남한 핵무장 매우 찬성. 3번 응답과 4번 응답을 합하여 '핵무장 찬성'으로 코딩함.

설로,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핵보유 여론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과 언론보도가 있었다(Choe 2022). 즉,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사된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이미 핵보유 찬성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림 III-7>의 그래프가 보여준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여전히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대통령 선거과정 전후에 한국 정부와 집권 보수 여당이 자체 핵보유 문제를 의제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했다고 보인다.

한편, 핵무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소개하면서 응답자들에게 핵무장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면 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실제로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핵개발에 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한미동맹 파기의 가능성,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 환경파괴 및 한국의 평화적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핵무장 시도는 한국에게 위험하고 경제적 부담도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그림 III-8>), 위기 가능성들이 고려되었을 때 응답자의 60% 이상이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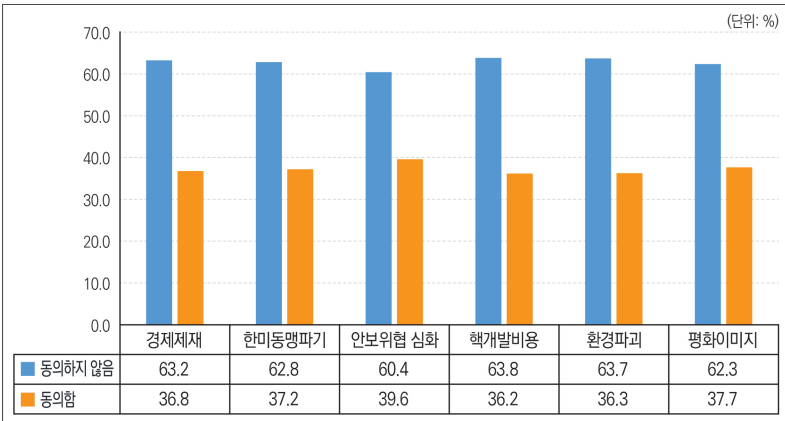
그림 III-8 핵개발에 수반되는 위기 가능성 인지



주 1: 경제제재 –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기 가능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자세한 조사문항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

주 2: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2점으로 환산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함.

그림 III-9 각 위기 조건하에서의 핵개발 동의 여부



주 1: 경제제재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기 조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자세한 조사문항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

주 2: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2점으로 환산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함.

지지 정당별로 핵보유에 대한 찬성여론을 비교해보면(<그림 III-10>),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핵보

유에 찬성하는 경향이 더 높지만, 두 경우 모두 2022년에 비해 2023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국민의힘 74.3%→65.0%; 민주당 62.4%→60.0%).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핵보유 찬성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7.6%에서 60%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1.8%에서 74.3%로 상승했다가 2023년에는 65%로 하락한 것이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 양극화된 선거운동과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보수진영의 강경한 태도가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 후보 지지자들은 보수정당 정치인들의 북핵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실패 주장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안보 불안감이 대선 이후 개선되었을 수 있다. 정치이념별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보수이념 응답자의 63.4%가 핵무기 보유를 찬성한 것에 비해 진보이념 응답자는 55.6%에 그쳐, 7.8%의 차이가 있었다(〈표 III-2〉).

그림 III-10 핵보유 찬성 여론: 지지 정당별 비교(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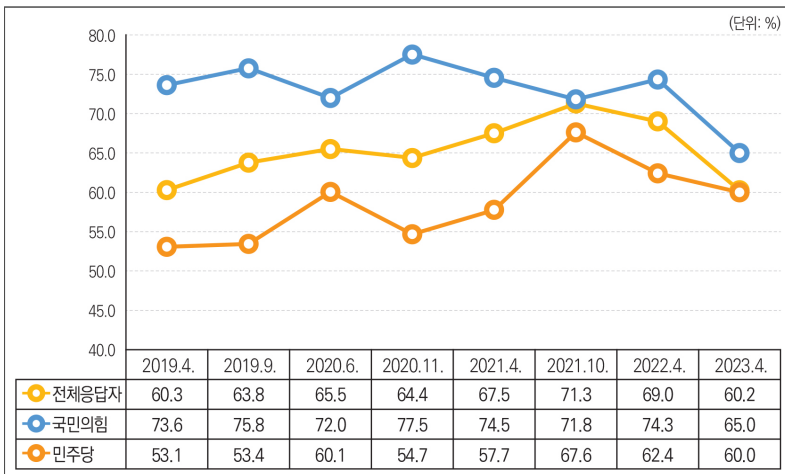


표 III-2 정치이념별 핵무기 보유 찬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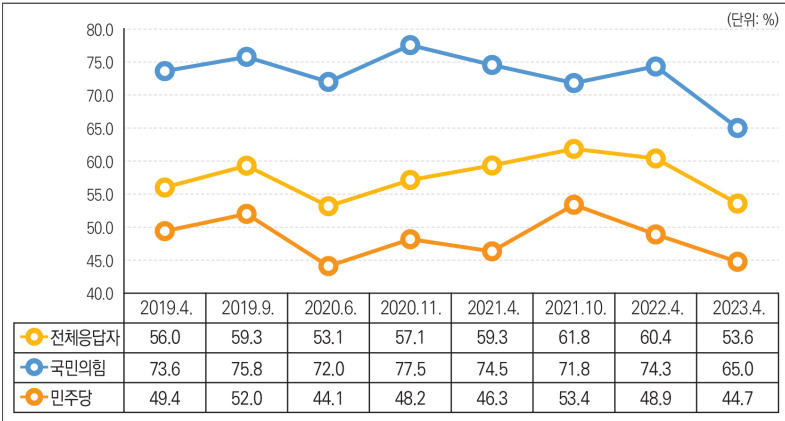
	진보	중도	보수	합계
핵보유 반대	44.4	39.9	36.6	39.8
핵보유 찬성	55.6	60.1	63.4	6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23년 조사 기준

이 관계에 미국의 역할도 포함하여 분석하면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이슈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1991년에 철수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KINU 통일외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2021년 61.8%를 정점으로 2023년에는 53.6%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자체 핵보유 여론과 유사한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11〉). 정당 지지에 따라 비교해 본 응답 분포는 특히 흥미로운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국 자체적 핵개발의 경우와 정확히 동일한 수준의 지지를 보낸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국 자체적 핵개발과 비교하면 15%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20% 이상의 차이로 상당히 낮은 지지율(44.7%)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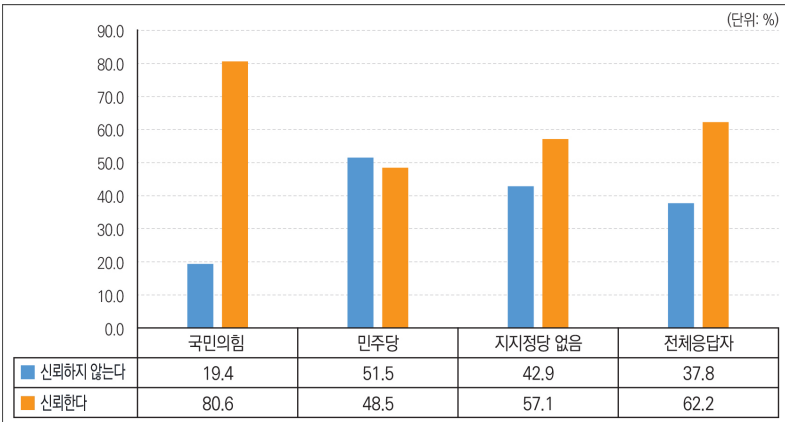
미국핵 재배치 문제를 이념성향별로 비교해봐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차이는 국내 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보수 응답자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중시하는데, 이들에게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수진영에는 이른바 ‘방기의 공포(fear of abandonment)’가 중요한 동인이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외교 정책의 자율성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

그림 Ⅲ-11 미국핵 재배치 찬성: 정당 지지별 비교(2019~2023)



적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의 자율성과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에는 소위 ‘연루의 공포(fear of entrapment)’가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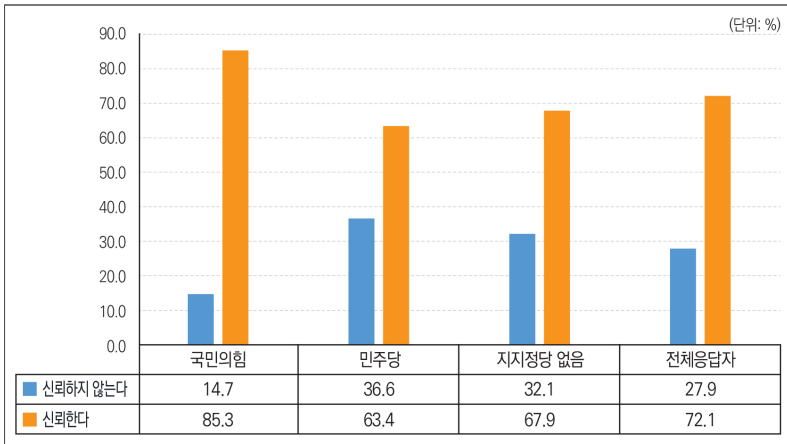
그림 Ⅲ-12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 지지 정당별 비교



주 1: 질문: “귀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한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이념적, 정당 정치적 노선에 따른 미국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KINU 통일의식조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의 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80.6%)와 민주당 지지자(48.5%)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III-12〉). 미국의 핵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지지 정당별로 비교해 보아도 거의 22%에 달하는 상당한 격차가 발견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85.3%가 미국의 핵확장억제를 신뢰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63.4%에 그쳤다(〈그림 III-13〉).

그림 III-13 미국의 핵확장억제 신뢰: 지지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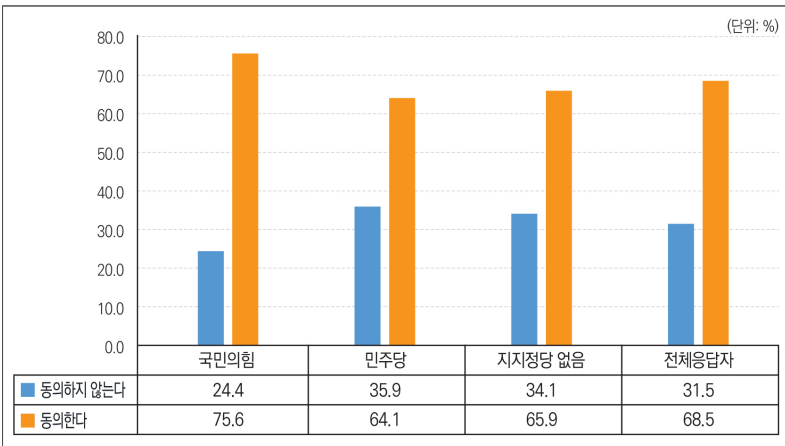
주 1: 질문: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 공격한다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동시에 응답자들은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 핵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III-14〉). 이 통계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미동맹에 회의적인 경향이 있음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으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 확장억제의 효과성 평가: 지지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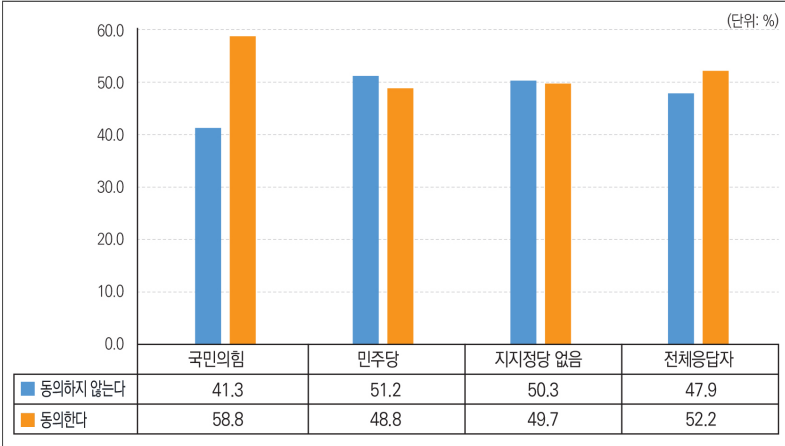
주 1: 질문: “미국의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의 필요성 문항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장억제 문제에 대한 국내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는 60%에 가까운 비율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동일했다. 전체 응답자중 과반수(51.2%)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었다(<그림 III-15>).

그림 III-15 핵확장억제와 한국 핵개발 필요성: 지지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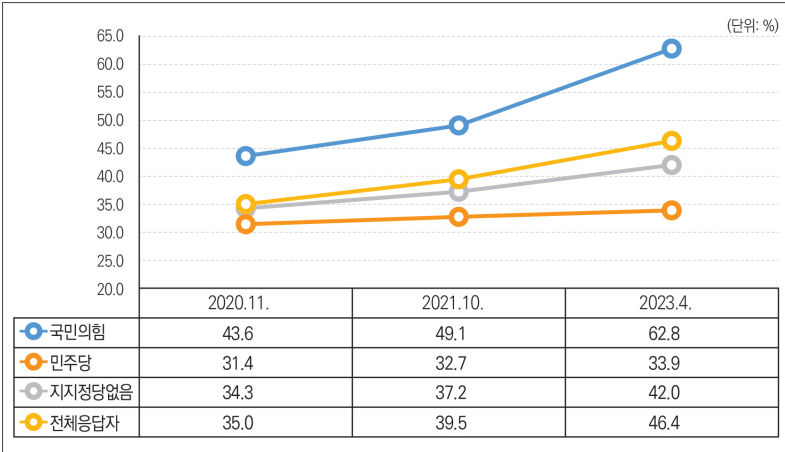
주 1: 질문: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국내 정치와 정치이념이 핵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핵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대신 미국이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다고 믿는지를 묻은 문항의 분석에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6>).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과반을 훨씬 넘는 62.8%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비율이 33.9%에 그쳐 거의 30% 격차를 보였다.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이 문항을 교차분석했을 때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보수 55.9%, 진보 39.5%)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발견되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2021년 49.1%에서 2023년 62.8%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과정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정당 사이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가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도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16 미국의 한국 국익 고려: 지지 정당별 비교(202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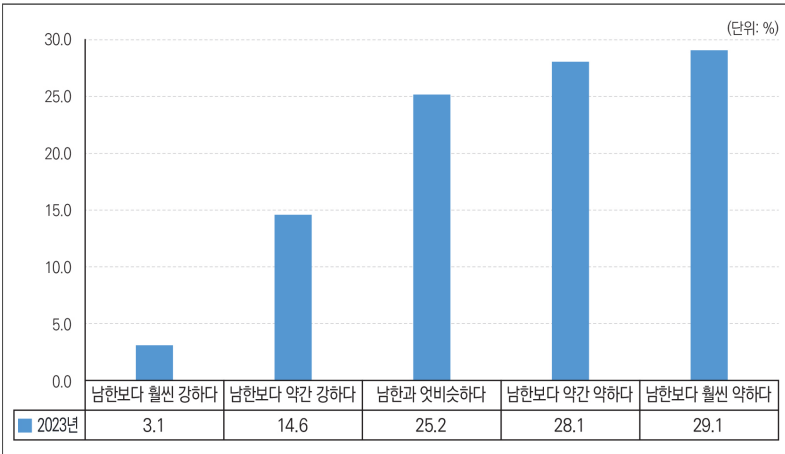


주 1: 질문: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 미국이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다는 응답을 그래프에 표기함.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측면은 한국이 자체적 핵무장을 통해 방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즉, 북한과 남북관계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즉 북한이 아직 충분한 핵무기를 비축하지 못했고, 그 무기의 수준이 낮으며, 무기의 신뢰도도 낮다면, 북핵 상황이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림 III-17>을 보면 한국 국민들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57.2%의 한국 국민들은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았으며,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했다.

그림 III-17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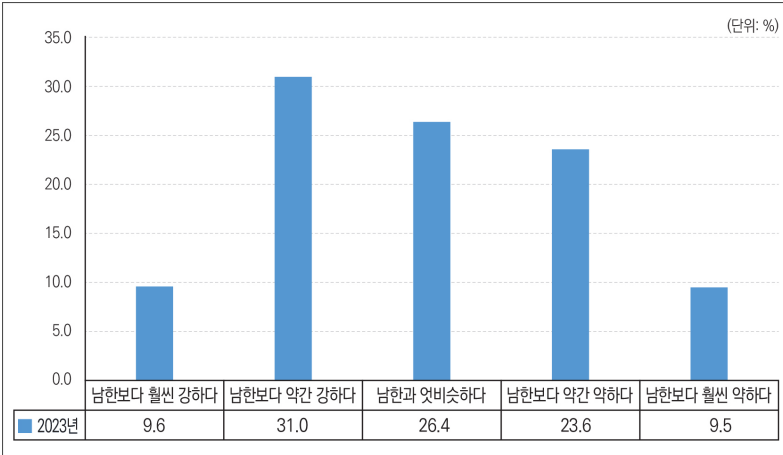


주: 질문: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 여론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는 <그림 III-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핵무기를 제외하지 않고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물었을 때 응답자의 40.7%가 북한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반대의 의견은 33.1%에 불과했다. 북한은 거의 20년 동안 핵무기를 비축해 왔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제한된 수준의 핵 억지력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머지않아 진정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 향상과 확장에 따라 북한의

핵 태세도 변화했는데, 이제는 국가 또는 체제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 발생 시에 ‘선제적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지도부 및 지휘 통제권이 파괴될 경우 핵무기를 자동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변형된 ‘데드 핸드(dead hand)’ 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8 남북 군사력 비교



주: 질문: “귀하께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들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하는 주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응답자의 45.1%가 북한의 핵 위협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그림 III-19>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도 지지 정당의 차이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 중 과반수(51.9%)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 우려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2.7%에 그치고 있다. 동시에 북핵의 위협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에 불과했고(<그림 III-20>), 북핵 문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

답한 비율은 18.4%에 불과해(〈그림 Ⅲ-21〉) 두 주요 정당 지지자 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Ⅲ-19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 지지 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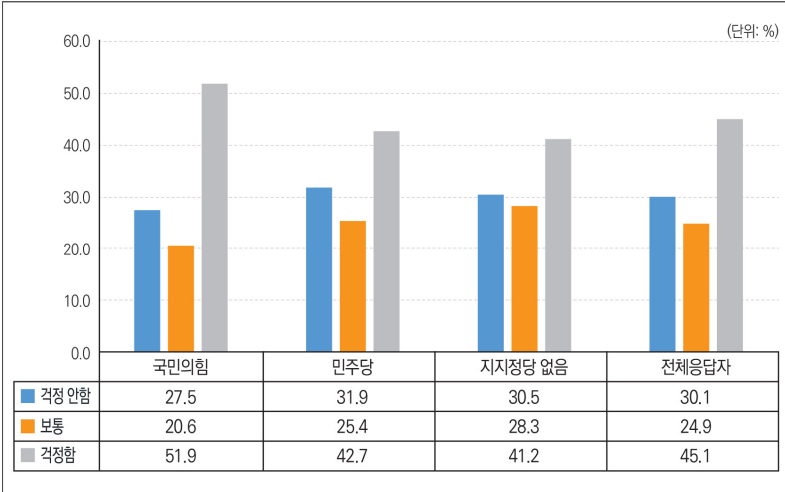


그림 Ⅲ-20 북핵 위협에 대한 관심: 지지 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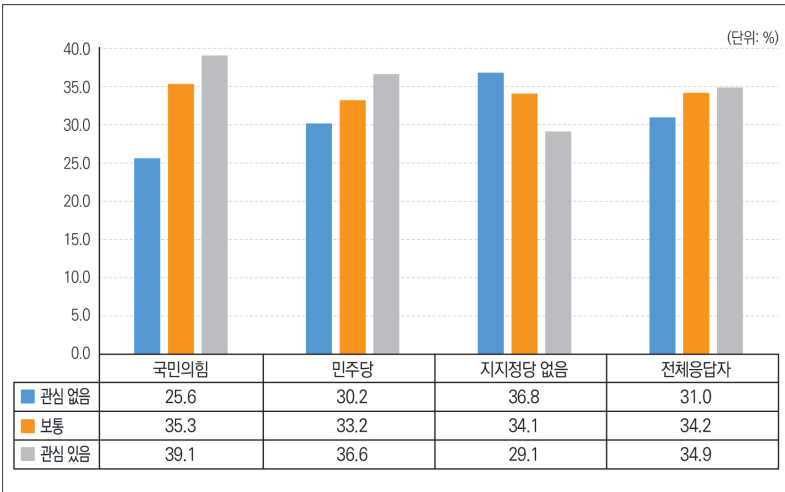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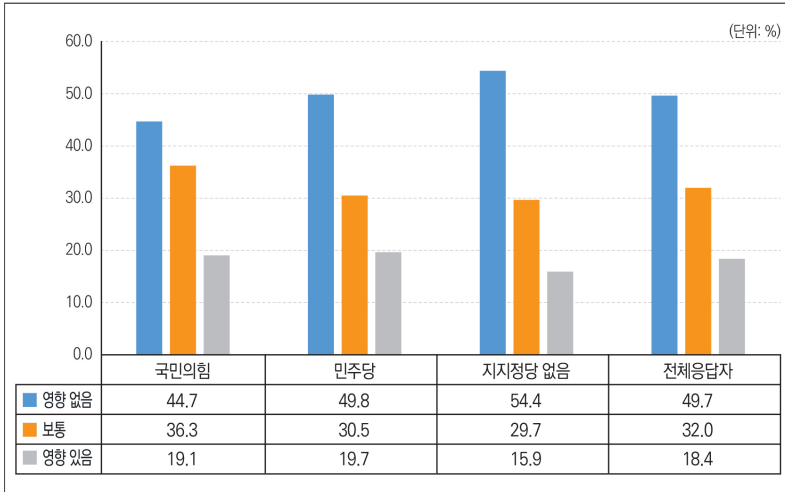


그림 III-21 핵 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지 정당별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에 익숙해져 있고,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위협 수준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여론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북핵 위협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그림 III-22>), 자신의 삶에 북핵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미만에 머물렀다(<그림 III-23>).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도발에 대한 이러한 낮은 관심과 일종의 피로감은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를 막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III-22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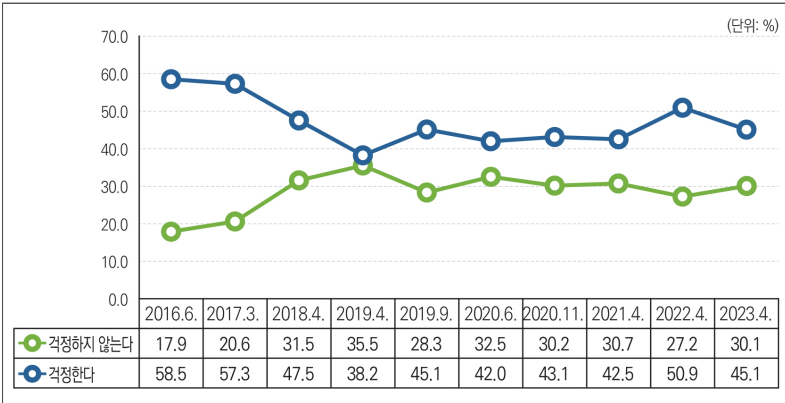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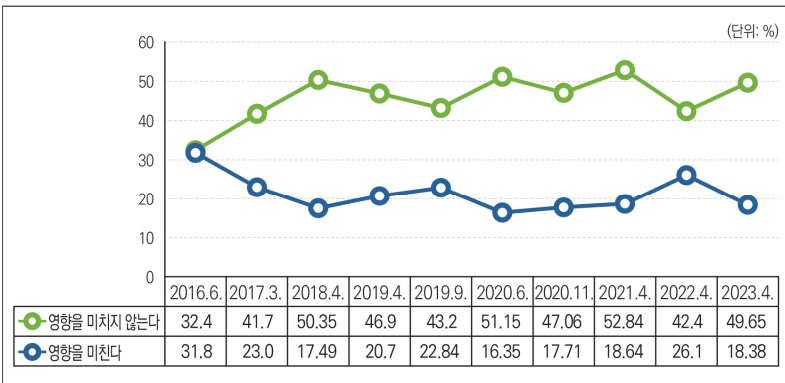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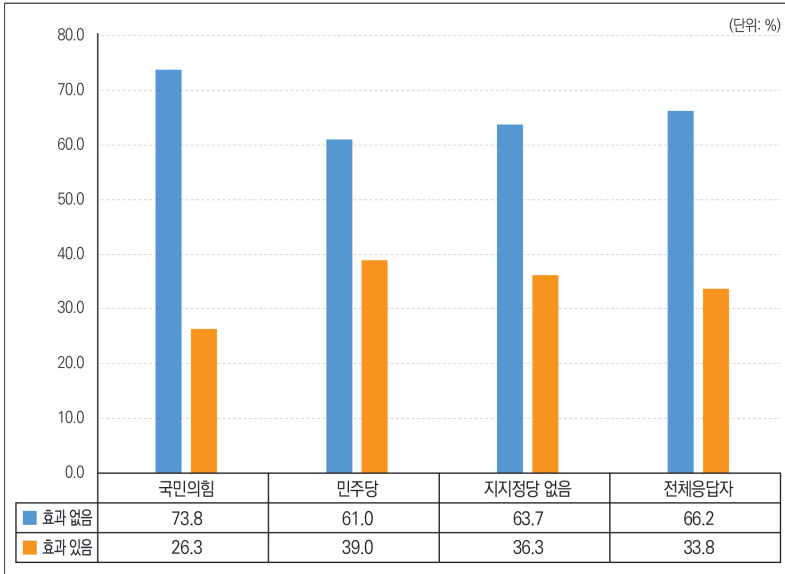


그림 III-23 핵 위협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2016~2023)



한국 국민의 과반수(66.2%)가 남북대화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그림 III-24>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만, 지지 정당별로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61.0%)에 비해 남북대화에 회의적인 응답(73.8%)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24 남북대화의 효과성: 지지 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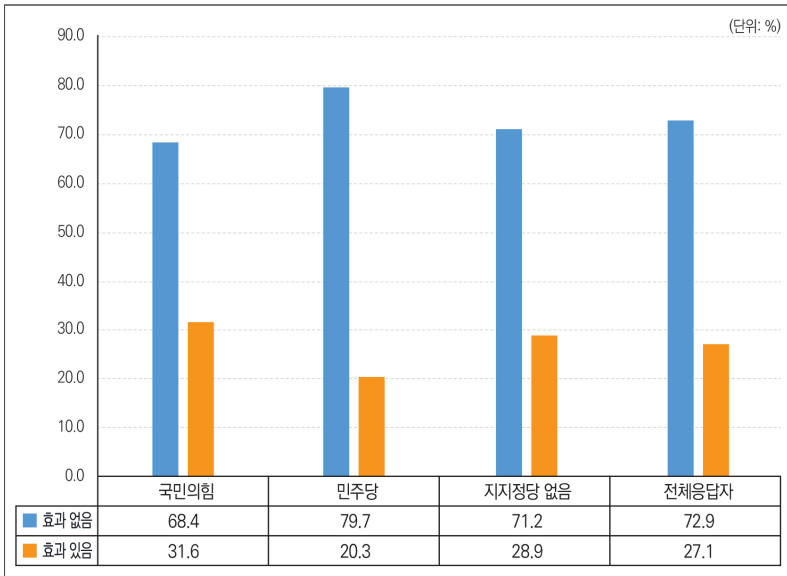
주 1: 질문: “남북대화와 남북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전체응답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72.9%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그림 III-25〉), 여기에서도 이념적·정치적 차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79.7%)이 국민의힘 지지자들(68.4%)에 비해 경제제재가 비핵화에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 응답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라는 당근과 경제제재라는 채찍을 통한 비핵화 방법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이 대북 대응 방식에 대한 국민 정서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2019년 72.4%에서 2021년 90.7%로 꾸준

히 증가하는 등, 북한은 핵무기는 계속 보유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인식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일관적으로 조사된 여론의 특징이었다. 동시에 한국 국민들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 그리고 2021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는 점 등으로 검증될 수 있다(〈그림 III-26〉). 이 문제에 대한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북핵 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를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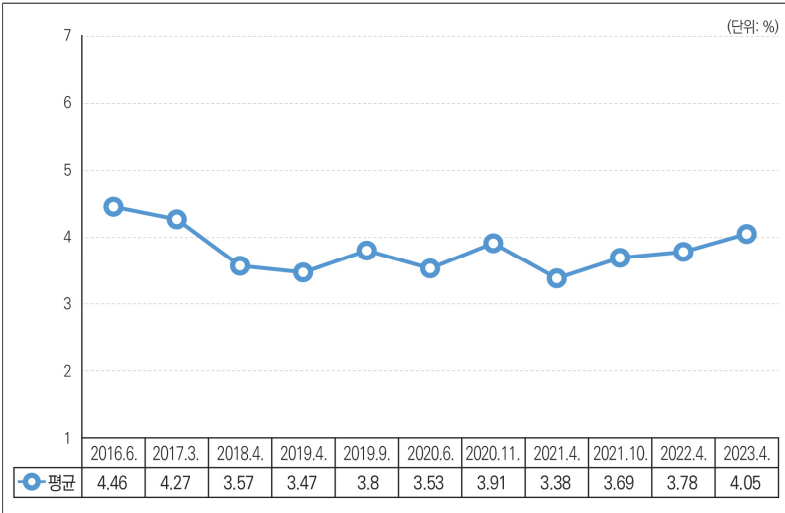
그림 III-25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지지 정당별



주 1: 질문: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2: 4점 척도로 측정 후 2점 척도로 환산함.

그림 III-26 북한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2016~2023)



이렇게 일반적 수준에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여론조사에서 주장하는 정도로 한국 국민들이 자체적 핵보유를 심각하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 대한 핵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 협상장으로 복귀하여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능력 증대는 역내 핵확산 혹은 미국의 핵군비 증가 등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정치의 양극화와 더불어, 북핵의 위협에 대한 강조가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 장에서 제시한 국민 여론의 동향이 지속될지는

내년의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6. 소결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및 이념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남북 간의 실질적 대치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국민들의 위협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일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변수가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2022년의 치열한 대선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 간의 양극화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이념적 분열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 및 이념적 분열의 기원, 그 분열에서 비롯된 여러 외교 정책의 전통, 그리고 최근 두 대통령의 외교정책 접근 방식에서 이 분열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제시하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장은 여론의 인식이란 측면에서 정당 정치와 이념이 어떻게 핵정치 인식에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찬반 태도 및 핵보유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한 인식, (2) 안보 및 핵확장억제와 관련된 대미관계에 대한 태도, (3) 북한과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미국은 한국의 주요 안보 제공자이고 북한은 한국의 주된 위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

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다른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확고하거나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를 찬성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그 찬성비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핵개발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 및 비용이 함께 제시될 경우 그 찬성 비율은 더욱 급격히 감소한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두 주요 정당 지지자들은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같이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KINU 통일외식조사는 한국의 보수진영이 미국을 상대적으로 좀 더 신뢰하면서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진보진영은 미국과 미국의 핵우산을 상대적으로 덜 신뢰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이 보수 진영보다 여전히 남북대화에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종의 체념 가까운 태도가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인들은 북한과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이라고 답하지만, 이 도발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북한과 북핵 위협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었다.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는 정치 공론장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진보와 보수 사

이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정치적 변화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